‘문인 불출마’ 광주 북구청장 선거판 요동

무주공산·경쟁구도 재편…민주당 경선 최대 변수
가점 유불리·단일화 여부 관전포인트…판세 안갯속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주 북구청장 선거 구도가 예측불허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문 청장은 10일 북구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구청장 선거는 물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도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명으로 ‘새로운 광주’를 준비해왔지만,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 부족함을 느꼈다”며 “저의 결심으로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던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자격심사 신청을 철회한 뒤 광주시당에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심사를 신청하며 3선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번 공식 선언으로 선거판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안정적 우세 지역으로 분류돼 온 광주 북구청장 자리는 경쟁 구도가 무주공산으로 재편됐다. 후보군이 다수 포진한 가운데, 절대적 우위를 점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경선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제 광남일보와 KBC광주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광주 북구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구청장 선거 다자대결에서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16.6%)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14.5%)이 오차범위(±4.4%p) 내 접전을 벌이며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동찬 민주당 당대표 특보(9.4%),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8.2%), 송승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7.1%), 김순옥 국민의힘 광주시당 대변인(6.1%), 정다은 광주시의원(5.2%), 정달성 북구의원(4.4%),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3.3%), 김대원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2.9%), 오주섭 전 광주경실련 사무처장(1.4%) 순으로 집계됐다.

양강을 형성한 두 후보의 격차는 2.1%p로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으며, 상위 후보들 모두 지지율이 20%를 밑돌아 ‘절대강자’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문 청장의 지지층 이동과 후보 재편에 따라 판세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적용될 가점과 감점 규정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신 의장은 여성 후보 가점을 적용받는 반면, 문 부대변인은 장애인 가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탈당 이력에 따른 감점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최종 득표 계산은 예측이 쉽지 않다.

여기에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만 10여명에 달하면서 군소 후보 간 연대 가능성, 단일화 여부, 불출마를 선언한 문 청장의 정치적 기반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D 역량 강화…전남형 혁신성장 구조 구축

도, 연구개발→창업·산업 전환→신산업 창출 전략

전남도는 10년 이내 연구개발(R&D) 역량을 전국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혁신엔진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개선안은 연구개발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 인재 양성의 핵심 성장 수단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창업·산업전환→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전남형 혁신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역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남은 전국 규모 국책연구기관 본원과 상위권 이공계 대학이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2020년 방사광가속기 등 주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유치와 대형 후속 사업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2025년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유치함에 따라 2026년을 ‘과학기술 진흥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 연구개발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외부 유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 잠재역량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기초체력 강화형 연구개발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역이 직접 기획·집행하는 ‘지역자율 연구개발’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점을 전남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과학기술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미래 신산업 중심의 중·대형 국가 연구개발 과제 발굴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전국 최초로 실국 주제별 연구개발 기획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기존 전략산업·에너지 분야에 집중됐던 연구개발 기획 구조를 해양수산, 기후환경, 재난안전, 국토교통 등으로 확대하고, 실국별 책임 기획 체계를 도입해 전남형 전략 과제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계한다.

또 연구개발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역할 확대, 공무원·산하기관 대상 연구개발 역량 강화 교육, 성과 중심 인센티브 도입, 타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등 실행력 중심의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중앙정부 주도의 수동적 연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전남의 기초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10년 안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전국 상위권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주당 “혁신당과 합당 당장은 어려워” 공감대

의총서 지선 이후 합당 의견
정청래 대표 리더십 치명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추진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당장 합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은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의총 결과를 반영해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정 대표는 특별한 발언 없이 “최고위원들과 잘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장에서는 20명 가까운 의원이 발언했는데, 지방선거 전 합당을 주장한 의원은 김영진 의원 등 1~2명뿐이었다.

하지만 합당 자체에 대한 명시적 반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당이나 범여권 통합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점과 통합 방식을 두고 여러 갈래의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주로 합당 시기와 관련해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 선거연대나 선거연합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여러 형태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합당을 지지했던 박지원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극단적 좌파 이념으로 가면 중도 확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조정해서 한숨 쉬어서 지선 후에 (합당) 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당내에선 최근 정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청와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정 대표에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늦게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에 코스트코·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국민의힘 광주시당, 6·3지방선거 정책방향 발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스트코 유치와 무등산 케이블카 및 궤도열차 설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1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5대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광주시당이 제시한 5대 정책기조는 먼저 로봇시대, ‘대기업 하기 좋은 도시’ 광주 기반 확보와 ‘광주 우선주의’에 기초한 지역 균형발전 모델 구축이다. 또 머물고 싶은 광주, 밤이 빛나는 관광·문화예술도시 구현과 ‘컴백홈(Come Back Home)’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실현, 여성·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도시, 광주 공동체 형성 등이다.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분야에선 △광주·전남 상속세 우선 폐지와 대기업 일자리 증가 △연봉 1억 이상 일자리 자유계약을 통한 청년 대기업일자리 확대 △로봇 시대 발맞춘 소득세 폐지와 부가가치세 감면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 △국가 AI 반도체 전용 컴퓨팅센터 설립 △충장로 주변 상가 공실 증가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화·예술·관광 공약으로는 △무등산 케이블카 및 궤도열차 설치 △광주공항 국제선 취항 △챔피언스필드 주변 야구 상권 조성 △코스트코 유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원 △K팝 아레나 건립을 제시했다.

여성 등 사회적약자 분야에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강화 △장애인 힐링 소통 쉼터 조성 △장애인 의료후불제 도입 △출산시 1억원 단계적 지원 △여성 AI 교육센터 설립 △일하는청년에 주차공간 양도 캠페인 등 공약을 소개했다.

안태욱 광주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대안 정당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다”며 “지난해 말부터 정책공약개발단을 운영하며 실용과 합리를 핵심 가치로 광주의 미래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조호권 전 광주시의장, 북구청장 출마 선언

“구민 체감 가능한 실력 행정으로 변화 이끌 터”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사진)이 6·3지방선거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조 전 의장은 1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은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며, 실력의 행정으로 북구를 바꾸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북구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의지보다 역량, 비전이 아닌 집행력이 바탕이 돼야 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장은 준비된 행정가가 북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1조원이 넘는 예산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며 “예산의 흐름을 아는 경제통인 만큼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민의 삼으로 정확히 돌아가게 만드는 재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북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조 전 의장은 “행정통합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량은 더 커질 것이며 준비된 자치구는 도약하고, 그렇지 않은 자치구는 뒤처질 것”이라며 “변화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산업·민생·에너지 대전환 실현 앞장”

명창환 전 전남행정부지사, 여수시장 출마

조국혁신당 명창환 전 전남행정부지사(사진)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명 전 행정부지사는 1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에 빠진 여수의 현실을 진단하며 “산업과 민생, 에너지를 동시에 살리는 대전환으로 위대한 여수의 영광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며 “산업과 민생, 미래를 동시에 살리는 근본적 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전 부지사는 시장 취임 즉시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비상경제대응체제를 가동해 석유화학 극 구조 탈피 및 로봇·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 등 소부장 산업 다극화와 정부공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 지정 추진, 수소에너지 밸류체인 구축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산업 조성, 산단시장실 설치를 통한 기업 애로 해결 및 투자 유치 직접 관리 등 핵심 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정책국 신설과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해상풍력·태양광 확대, 에너지자립섬 추진,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 “여수를 대한민국 기후·에너지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출퇴근 시내버스 시민 무료화, 청년 만원주택 300호로 확대, 1인 가구 전담팀 신설 등 시민 밀착형 정책도 발표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고흥의 막힌 현안 해결 하겠다”

신순식 전 전남체신청장, 고흥군수 출마

신순식 전 전남체신청장(사진)이 고흥문화회관에서 6·3지방선거 고흥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신 전 청장은 지난 9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30년 국정 경험의 검증된 실력으로 고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고흥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문턱을 넘고 예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라며 “말이 아니라 ‘결정’을 해본 사람이 고흥의 막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전 청장은 고흥 재도약을 위한 ‘5대 혁신 비전’을 발표했다.

5대 혁신 비전은 △어르신·어린이·1인 가구 중심의 돌봄 인프라 정비 및 응급·주거 안전 강화 △도서 접근성 개선, 이동시간 단축 및 응급대응 속도 혁신 △농업 자동화, 물류 혁신 및 우주·드론 등 신산업 육성 △읍내 상권 부활, 관광벨트 구축 및 소상공인 회복 프로젝트 추진 △청년 귀향 원스톱센터 운영 및 주거·육아 지원 등 인구 유입 기반 확충 등이다.

신 전 청장은 5대 비전을 관통하는 핵심 실행 공약으로 ‘고흥 소형 공항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KTX 유치라는 요원한 약속 대신, 기존 고흥항공센터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저예산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소형 공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